

공공공사 ‘저가낙찰’ 건설업계 아우성

공사 예정가격 대비 85% 전후 건설사 경영난·부실시공 우려
“공사비 현실화 위한 제도 시급”

강원지역에서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대부분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진행되면서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도내 건설사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시행사는 대부분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선정된다. 건설사들이 공사가능 금액으로 내건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내 공공공사 적격심사의 낙찰률이 최근 5년간 공사 예정가격의 85% 전후로 낮아지면서 도내 건설사들이 설계가격의 10~20% 부족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이달 개찰된 철원의 한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86억여원이지만 74억여원에 낙찰, 예정가격보다 12억여원(14%)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도 예정가격보다 적은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개찰된 춘천과 화천을 잇는 도로 주변 보수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2억7274만원이지만 실제 공사 추진가격은 2억3664만원으로 2900만원(13%)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20% 정도 떨어지자 비교적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발주기관이 정한 공사 단가가 현실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건설공사 발주처가 판단한 제한가격내 최저 계약단가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저가낙찰에 뛰어들고 있다는 업계의 판단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비용산출 제도를 보완하거나 적격심사제도 낙찰가율 제한선을 최소 90%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